

② 한편, 내년 대외여건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급변동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금년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-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여타지역의 성장 지속으로 완충되어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

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	잠재 성장률 ¹⁾	2005	2006 ^e		2007 ^e	
			(06.9)	(06.4)	(06.9)	(06.4)
· 세계경제성장률	3.9% 수준	4.9	5.1	4.9	4.9	4.7
(미 국)	3.0% 수준	3.2	3.4	3.4	2.9	3.3
(유 로)	1.9% 수준	1.3	2.4	2.0	2.0	1.9
(일 본)	1.3% 수준	2.6	2.7	2.8	2.1	2.1
(중 국)	-	10.2	10.0	9.5	10.0	9.0

1) 과거 5~10년간 성장률 평균

- 국제유가도 지정학적 요인이나 공급차질 요인 발생시 일시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, 금년보다 소폭이나마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기관들의 견해임

주요 전문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(단위 : \$/b, 기간평균)

	유종	2005년	2006년	2007년
CERA(10.17)	Dubai	49.2	60.5	55.5
EIA(11.7)	WTI	56.5	66.3	65.2
CGES(10.23)	Brent	54.3	64.6	58.7

<註> CERA :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, EIA : 美 에너지정보청, CGES : 런던 세계에너지센터

(국내 여건 점검)

③ 다음으로 국내 경기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연초에 예상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- 분기별로 다소의 진폭은 있었으나 계절조정 전기비 1%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,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상저하의 성장에 따른 반작용으로 상반기 5.7%에서 3/4분기 4.8%로 둔화되었음

실질 성장률 추이(%)

	연간	2005년				2006년		
		1/4	2/4	3/4	4/4	1/4	2/4	3/4
전년동기대비	4.0	2.7	3.2	4.5	5.3	6.1	5.3	4.8
계절조정 전기비	-	0.5	1.4	1.6	1.6	1.2	0.8	1.1

- 한편, 10~11월 실물지표를 볼 때 4/4분기 들어서도 거시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추세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- 10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활동이 각각 4.6%와 3.2%로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추석이동 효과 등을 감안하기 위해 9~10월 평균으로 볼 경우 산업생산은 10.3%, 서비스업활동은 4.8% 증가하는 등 10월 지표 둔화폭은 추세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

* 산업생산(%)

: (06.1/4)12.0→(2/4)10.9→(7)4.5→(8)10.9→(9)16.5→(10)4.6, (9~10)10.3

* 서비스업활동(%)

: (06.1/4)6.1→(2/4)5.3→(7)1.9→(8)4.9→(9)6.4→(10)3.2, (9~10)4.8

- 수출도 견조한 해외수요에 힘입어 지난 12월 5일 3,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음 (10월 10.8%에 이어 11월은 19.8% 증가, 1~11월중 14.8% 증가)

* 수출(%) : (06.1/4)10.6→(2/4)16.9→(3/4)16.4→(10)10.8→(11)19.8

-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년중 연간 5% 성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※ 금년 1~3분기중 전년동기대비 5.4% 성장하였으므로 4/4분기중 3.9% 이상 성장시 연간 5% 성장이 가능

- ④ 그러나, 최근 경기흐름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

- 3/4분기 민간소비는 계절조정 전기비로 0.6% 증가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4.0%로 둔화되었음

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추이(실질, %)

	05.1/4	2/4	3/4	4/4	06.1/4	2/4	3/4
전년동기대비	1.6	3.0	4.0	4.2	4.8	4.4	4.0
계절조정 전기비	0.5	1.4	1.0	1.1	1.3	0.9	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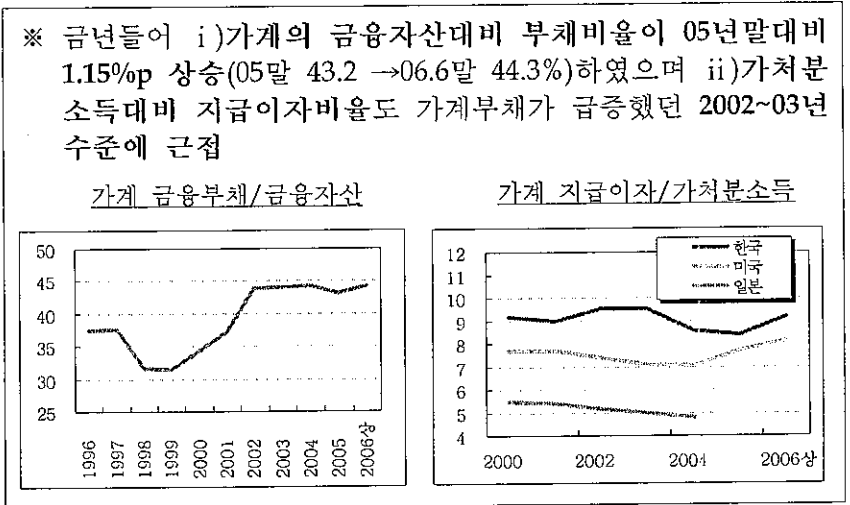
- 생산측면에서도 산업생산은 내수보다는 수출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소비 등 내수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활동은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임

- 이처럼 최근 소비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

- 작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GNI 부진이 시차를 두고 고용 등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,

* 취업자 증가(만명) : (05)30→(06.1/4)33→(2/4)28→(3/4)29→(10)28

- 가계부채 증가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



(내년 전망)

- ⑤ 이러한 최근 국내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,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

- 민간소비는 고용 등 가계소득여건의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저축률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

- 설비투자는 양호한 선행지표들을 볼 때 내년에도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나, 구조적 투자제약요인(설비투자 성향 보수화, 중국경제 부상, 신규 수익모델 부재 등)들이 상존하고 있어 증가세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
- 금년중 (-)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는 내년에 (+)로 전환되어 금년보다 회복될 전망이나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
- 한편, 수출의 경우 내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증가율은 금년보다 낮은 10% 내외로 예상하고 있음

⑥ 이러한 국내경기 여건은 지난 7월 4.6% 성장 전망 당시에도 대부분 고려했던 것이었으나,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
- 그러나, 당초 크게 우려했던 북핵 사태의 경우 내년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상존할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심리지표나 실물지표를 통해 볼 때, 그에 따른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는 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

- 한편, 국제유가의 하향안정세 등 지난 7월 전망 당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여건 변화도 있는 상황으로

이 경우 내년에는 GNI 증가율이 성장률에 근접함으로써 특히 하반기 이후 소비 등 내수회복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 앞으로 보다 면밀한 점검 작업과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“경제 전망 T/F” 논의 등을 거쳐 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나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지난 7월에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정책 방향]

⑦ 한편,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가운데,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·미시적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

- 우선, 내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고

○ 부진한 내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미시적 대응에 중점을 둘 계획임

- 기업환경개선대책(06.9)의 상시 점검·보완,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한편,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확대 등 부진한 건설투자의 보완 노력도 강화할 방침임

- 아울러 서민금융활성화,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, 주거복지 확충 등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음

○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선진화, R&D 투자의 효율화, 고급 우수인력 양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의 추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

⑧ 현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마련하는 중이며

각계각층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,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계획임

2-1

최근 부동산 시장 및 「부동산 대책반」 논의 동향

[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]

□ 「11.15 부동산 시장 안정화방안」 발표 이후,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조금씩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

* 수도권 주간상승률 : 1.3%(11.13)→1.0%(11.20)→0.8%(11.27)

○ 다만, 아직 시장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나가겠음

[부동산 대책반 논의동향]

□ 11.15 방안 발표이후,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「부동산 대책반 회의(반장 :재경부 1차관)」를 3차례 개최하여

* 매주 1회 개최가 원칙으로 12.8(금) 차기 회의 개최 예정

○ 『공급일정 조정(‘빨리’)』, 『물량 확대(‘많이’)』, 『분양가 인하(‘싸게’)』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

⇒ 세부 과제와 과제별 진행 경과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별도 설명토록 하겠음

□ 한편 조기에 분양가 문제를 결론내기 위해 「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」 검토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음

참고 「11.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」 개요

1. 공급 확대

①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

-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
-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⇒ 8.9만호 추가 공급
- 택지개발 기간단축 ⇒ 신도시의 경우 현행 7.5년→5~6.5년

②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

-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
-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
- 다세대·다가구, 주상복합·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

⇒상기 제도개선으로 '06~'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당초 74.2만호→86.7만호로 12.5만호 증가

2. 분양가 인하

① 택지조성비 절감 :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

② 중소형(25.7평이하)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

⇒상기 제도개선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(10% 내외),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(8% 내외) 등으로 약 25%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

3. 수요관리 방안 : LTV,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

4. 서민주거 안정방안

① 장기 임대주택 비축·공급 확대

②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: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

2-2

종부세 관련 대국민 협조 요청

□ 종부세는 과거 불합리하였던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

○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보유재산가액에 과세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매우 낮고, 거래단계의 세금(취득세, 등록세) 비중은 매우 높아

○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산투기 억제기능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음

□ 이번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2주택이상 다수 주택 보유자가 71.3%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보유세제가 다주택 보유 욕구에 대한 억제기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

○ 또한,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70% 이상이 7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여 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

- 일부지역에서 중부세법의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중부세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청원이나 납세 거부 운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- 중부세의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한 최근 정부가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위헌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
- 따라서,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하지만
-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
- 이러한 민주시민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은 양식있고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자제되어야 하고,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드립니다

3

서민금융 활성화 방안

-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 -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,
 - ②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,
 - ③ 대안금융 활성화,
 - ④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

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있음
- 현재 마련중인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① 우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
 -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, 공공정보 활용 등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 - ②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
 - 수표발행 허용, 직불카드 취급 등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신규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
 -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임

③ 대안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

- 휴면예금,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“공익재단”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④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

- 대부업에 대한 총괄감독기능을 강화하고, 대부계약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,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
□ 이와같이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,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등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

- 대안금융 활성화,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 서민 금융활성화 방안을 확정·발표할 예정임

□ 정부는 내국인의 다양한 해외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,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

-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임

□ 주요내용으로는,

- ①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요건 및 기간의 단축 등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고
- ②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상향조정 및 투자 절차의 개선 등임

□ 다만,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문제등을 포함하여 해외투자 확대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

- 관계기관간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만큼 논의중에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임

□ 한편, 검토중에 있는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외환자유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

○ 금년 5월에 발표한 「외환자유화 추진방안」에 의하면

- '06~'07년중에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, '08~'09년중에 한도를 폐지키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안임

□ 특히,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와 거주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이미 자유화('06.3)된 상황에서

○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

□ 앞으로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시, 보완 장치도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,

○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

5

외화 외평채 발행 필요성 및 결과

□ 지난주 목요일(11.30, 런던시간) 글로벌 투자자의 큰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발행된 10억불 상당의 외화 외평채 발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<외화 외평채 발행 필요성>

□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, 금번 채권발행은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며

○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시 기준금리(benchmark) 역할을 강화하고

○ 발행과정에서의 IR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음

□ 특히 외화 외평채 발행잔액 60억불중 30억불이 08년에 일시 만기도래할 예정으로

○ 금번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준금리 역할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
<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및 만기일정 >

구 분	'98	'99~'02	'03	'04	'05		'06	
발행(억불)	10	30	-	10	4	5억 유로	5	3.75억 유로
만기(년)	2003	2008	-	2013	2014	2025	2015	2016 2021
잔액(억불)	40		40	40	50	60	70	

< 발행 결과 >

□ 금번 발행은 10년만기 달러표시 채권 5억불과 15년 만기 유로화표시 채권 3.75억유로 두 종류로 구성 되었으며,

- 가산금리는 각각 美 재무성 채권금리 + 69.6bp와 유로 미드스왑금리 + 25bp 수준에서 결정되었음

< 06년 외화의평채 발행 세부내역 >

	유로화 표시	달러화 표시
- 발행규모	3.75억유로	5억불
- 만 기	15년(2021년 만기)	10년(2016년 만기)
- 발행금리	유로 미드스왑금리 + 25bp (0.25%) = 4.259%	미 재무성채권금리 +69.6bp (0.696%) = 5.179%
- 표면금리 (coupon rate)	4.250%	5.125%

□ 이러한 채권발행은 가격조건면에서 매우 유리한 수준에서 발행된 것으로

-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의 경우 동일만기 외평채중 역대 최저 가산금리 수준에서 발행되었으며,

< 10년만기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시 가산금리 추이 >

발행년도	98년	03년	04년	06년
발행시 가산금리	T+355	T+92	T+85	T+69.6

- 1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의 경우에도 이론적인 가격보다 아래에서 결정된 것으로 평가됨

- 이처럼 유리한 조건에서의 발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신인도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

< 발행의 의의 >

□ 금번 발행으로 외평채의 만기구조가 다양화되고 추가 유동성이 공급되어,

해외 자금조달 및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중인 국내기업들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

- 우선 유로화채권의 경우, 작년 10년물 최초발행 이후 금년 15년만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

- 만기구조가 15년까지 연장되어 만기구조를 다양화 하고 새로운 차입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으며

- 달러화 표시 채권 역시 05년 이후 중지되었던 10년물 발행을 재개하여 민간부문의 주된 차입원인 달러화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보완하였음

□ 또한 동 채권은 주문규모(Order book)가 발행금액의 2.5배를 넘어서는 등 유럽,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

- 특히 유로화 채권의 경우 유럽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새로운 투자자 base를 개척하는데에도 기여 하였음

□ 한편 금번 외평채 발행 기회를 활용하여 실시된 IR에서는

○ 북핵사태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잔존하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음

○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동등대우 원칙과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등을 설명하여

-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반외자 정서관련 불안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하였음

□ 금번 IR을 통해 국제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

○ 향후에도 적기에 해외 IR을 실시하여 해외투자자와의 직접대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

6

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준비

□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

○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,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'고용을 동반하는 성장'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

* '90~'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 일자리(연 4만)가 감소한 반면, 서비스산업에서는 약 640만개 일자리(연 42만)가 증가

○ 또한, 한·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

□ 그 동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,

○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

* '00~'05년간 업종별 고용증가율 (%) : 사업서비스(52.48), 교육(31.65), 보건·사회복지(50.93), 오락·문화·운동(37.26), 도·소매(-2.22), 음식·숙박(7.24)

□ 그러나, 그간의 다양한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규제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, 최근 해외 소비의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

* 서비스수지 적자추이(억불) : ('01)△38.7 → ('02)△82.6 → ('04)△80.5 → ('05)△130.9 → ('06.1-10)△154.5

□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경제단체, 관련 업계, 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,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여 왔음

□ 이번 대책은 ①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의 개선, ②유망서비스업종의 발굴·육성, ③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의 3가지 접근 방식으로 마련

①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

- 제조업과의 차별시정,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, 세제·금융지원 확대,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등 약 50여개 과제로 구성

② 유망서비스업종의 육성과 관련,

-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,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21개 분야를 발굴하였으며,

-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개략적인 추진 방향만 포함하고, '07.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부적 추진방안을 발표해 나갈 계획

* 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, 모바일서비스, 해양레저스포츠 산업, 시험·분석 서비스, 물류토탈서비스, 선박검사서비스 등

③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은

-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, 고급화·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약 60여개 과제가 반영된 종합적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

- 영어교육, 외국인유학생 유치 등 국내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포함될 예정

□ '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'은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2월 중순경 발표할 계획임

□ 금주 월요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* 정부조달(12.4. 제네바) 및 SPS(12.19~20, 워싱턴)분과 별도 개최

□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세부적인 협상 내용과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분야의 논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

① 먼저 현재 무역구제, 자동차, 의약품 등 3개 분과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

○ 무역구제는 우리측이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
- 우리측은 반덤핑 절차 등과 관련하여,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핵심 5가지* 요구사항을 12 5일(현지시각) 미측에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음날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

* ①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, ②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, ③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와 협의, ④반덤핑 관세부과 유보(사전 가격 및 물량 조절), ⑤Facts Available(미리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,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기한 연장)

○ 그러나, 이에 대해 미측이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으므로써 우리측은 미측의 관심분야인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도 중단시키게 되었음

*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,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협상을 취소

○ 무역구제는 사실상 금년 말까지가 협상 시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,

- 남은 기간은 물론 연말까지 우리측 입장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

② 나머지 분과에서는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

○ 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의 관세 양허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핵심사항이며,

- 섬유의 경우는 12월 8일에 워싱턴에서의 고위급(차관보급)회담이 계획되어 있음

○ 농업분야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별 관세 양허안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음

-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금번 협상에서 관세양허와 관련하여 논의하고는 있으나 이번에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,

- 농업분과에서는 美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음

* 다만, 미측은 향후 의회비준 등을 감안할 경우 쇠고기 수입재개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전달

○ 서비스 분야에서는 11월 27일에 교환된 양측 수정 유보안의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유보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

- 특히, 우리측 관심분야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커니즘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

○ 금융분과에서는 미국 보험중개회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*과,

보험 부수 서비스 중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 손해사정과 보험계리업 분야에 대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음

* 해상, 항공, 운송, 재보험 등 : 기업으로 국한되고, 고객 자체가 전문적이어서 민간에게 피해가 없음

□ 앞으로도 미 현지에서 추가적인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어서 보다 세부적인 협상결과가 나올 것임

□ 마지막으로,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협상단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라며,

○ 아울러, 어제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,

- 불법시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